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5.2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80)		담 당 자	장원석 사무관 (02-2100-2682)	
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김 진 홍(02-2100-2601)			김민석 사무관 (02-2100-2518)	

2. 금융위·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

-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 조사권을 가진 금융위(자본시장조사단)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

※ '13년 관계기관 합동 「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」에서 중요사건의 금융위·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되었으나,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 조사 실시사례는 없음

-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

* 현 조사업무규정은 공동조사를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사항으로만 정하고, 그 외 공동조사 결정권자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

-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(현장조사권 등)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 요청 가능

3.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강화

- (대리인 참여 및 열람·복사)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,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*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·복사를 허용

*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, 피조치자에게 조치 예정수준 등을 사전통지

- 다만,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*

* 대리인 입회를 제한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,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

- (사전통지 내실화)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 하고,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

- (영상녹화 고지) 조사과정 영상녹화시,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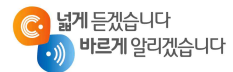
II 향후 계획

-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(5.3일 예정)
 - 다만, 금감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련, 조사원 교육, 대외 안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 - 금융위의 요청(4.16일, 공문시행)에 따른 특사경 사무실 설치, 내부 규칙안 마련 등의 준비가 완료되고,
 -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*할 계획
- *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차
- 아울러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/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- (특별사법경찰) 일반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
 -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,
 - 시·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,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히 수사
- (Fast-Track) 긴급·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 ('13~18년 총 91건)
- (자본시장조사단) 200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2013년 신설된 조사전담부서로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(압수수색)을 보유
- (조사심리기관협의회)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간 조사정책 및 방향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 (위원장: 증선위 상임위원)
- (자본시장조사심의회)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사전심의하는 회의체 (위원장: 증선위 상임위원)